

지선 신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사회 곳곳 멧힌 한 풀기 전 상생 어렵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 지선(知謙·72)스님은 지난 5일 장성 백양사에서 가진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선배들은 떨어진 (나무) 껍질처럼 땅에 떨어져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줘야하는데 무거운 자리를 맡게 돼 영 형편이 곤란하다”고 어렵사리 입을 뗐다.

그러면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책임지는 자리를 맡게 된 이상, 결정 전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방침이 서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답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석 중인 14명의 이사진 임명에 대해선 “서두르지 않겠다”면서 “사업회 명칭이 말해주듯, 서술 퍼런 군부독재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이 땅 민주주의 정착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핀 후 적임자를 행자부 장관에게 제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민사회가 전임 박상준 이사장(2014년 2월~2017년 2월) 시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해 “이사장과 이사진 모두 보수정권 낙하산”이라 규정하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반쪽짜리로 전락, 제구실을 못했다는 점을 인식한 듯 “이사진 구



팅구리, 사기꾼이다”고 일부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국민을 향해선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보았지 않느냐,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을 보지 않았느냐. 절대 속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선 “스님도, 목사님도, 신부님도 이제 세상의 눈높이에 맞춰야한다. 재산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한다”면서 “종교가 국민 지지를 받기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지난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예산은 60억원 수준(2014년 기준)이다.

지선스님은 김대중·김영삼 등 야당 지도자와 문익환 등 재야인사들과 함께 불교계 대표이자 광주·전남 지역 대표로 6월 6일 행재의 한복판에 섰다. 1987년 6월 10일 덕수궁 영성공회 성당 꼭대기에 올라 “민주헌법정체 국민운동본부입니다. 우리는 오늘 장충체육관 민정당 대통령 후보선출 대회에서 노태우 씨가 선출된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무효화합니다”라는 방송

이사진 구성·조직 운영 민주성 확보

좌고우면 않고 적임자 추천할 것

명칭 걸맞게 민주정신교육·기념사업

성과 조직 운영 전반에 민주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그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최대 현안으로 거론되는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과 관련해선 “부지선정에 따른 장기표류, 부지선정에 따른 불필요한 지역다툼을 부를 바엔 4·19와 5·18로 대표되는 마산(장원)과 광주 2곳에 모두 건립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지선스님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이라 구체적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 “사건이지만, 모든 게 집중된 서울에 기념관까지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 협조를 얻고 예산을 늘리더라도 갈등이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에 관해선 “사업 명칭에 걸맞게, 단순 기념행사만 주관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민주화 정신이 스며들도록,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되도록 다양한 교육·기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큰 틀을 제시했다.

지난 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사장 임명 통보를 받은 지선스님은 상근하지 않고 주요 행사 및 주요 의사결정시 사무실로 나설 방침이다. 이사진 구축을 완료해 기념사업회 조직을 안정시킨 후 자신이 방장을 맡고 있는 장성 백양사와 서울을 오가며 주요 현안과 사업회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지선스님은 “허허” 웃으며 “나이 든 내가 삼임 이사장, 상근 이사장으로 활동하면 나라가 비상사국 아니냐. 절도 돌봐야 하고 이사진만 제대로 꾸리고 큰 틀을 제시하면 별 무리 없이 조직이 제 구실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선스님은 군부독재 시절이던 1980~9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선 불교계의 대표적 인사답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현안뿐 아니라, 우리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의견을 쏟아냈다.

그는 “해원상생(解冤相生)이요, 해원이 먼저고 그 뒤가 상생”이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멧힌 한 풀어주기 전 협치와 상생은 어렵도 없다”고 했다.

스님은 “한이 쌓인 사람들, 눈에 핏발이 서린 사람들이 한 돌이 아닌데 어떻게 과거는 잊고 미래를 보자는 게 가담기는 한 소리냐. 청산 없는 협치와 상생을 강조하는 정치인은 순 명



1987년 6·29선언 이후 한자리에 앉은 지선스님, 문익환 목사,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왼쪽부터).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이 보여주듯, 지선스님과 문 목사는 “노태우 민정당 후보에 맞서 정권교체를 위해선 양김(兩金)이 단일화해야한다”고 촉구하며 중재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백양사 제공>

국민들, 세월호처럼 속아선 안 돼

재산과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어

스님·목사님도 세상 눈높이 맞춰야

했다가 붙들려가 고초를 겪었다.

5·18이 폭도가 일어난 사태로 취급받던 지난 1989년 광주에서 ‘5월제’를 주도했고 조선대생 이철규 열사 의문사 진상규명 범국민회의 상임공동의장, 박종철·이한열 열사 민주국민장 공동대표를 맡는 등 업적했던 시절 민주화 시위의 맨 앞줄에 섰으나, 지난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조계종 제 18교구 본사인 고불총림 백양사에 칩거하면서 참선 정진해왔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5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잘했다

복지부 평가 공익활동 분야 1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6년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공익활동 분야에서 전남도가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2년 이후 5년 연속이다.

이번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부문은 순천시, 수행기관은 순천 린제노인복지센터, 여수시노인복지관, 동여수노인복지관이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단순 환경개선사업의 비중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지난해 517억원을 들여 485개 사업 2만500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자체적으로 추진한 ‘시니어 새일터 지원센터’와 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등 베이비붐 세대인 60~64세 중·장년층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 알선 및 취업교육도 중점 지원했다.

또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한 고객과 환자에게 안내나 말벗 등 자원봉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서비스 실버코디네이터’ 파견사업을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운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에는 관공서 최초로 ‘시니어 택배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 청사에 집하장을 설치해 택배 물품을 어르신들이 직접 배송·접수하는 등 규모는 작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다.

올해는 2016년보다 74억원이 늘어난 591억원을 들여 어르신 2만 7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전남도, 시설원에 현대화사업 171억 투입

전남도는 시설원에능가의 실질적 농업소득 증대와 안정적 수출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시설원에 현대화사업에 171억원을 투입한다.

시설원에 현대화사업은 온실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장미 등을 생산하는 농업인 가운데 농협·APC 등과 공동출자 약정서를 체결한 농업인에게 관수·관비 시설과 온실 환경관리 시설을 지원해 원예작물의 품질과 농업인의 작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요 지원 시설은 양액재배시설, 점적관수, 순환팬, 자동개폐기, 무인 방제기 등이다.

전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고품질 시설원예작물을 생산하고 생산비를 절감함으로써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와, 일본과 동남아 등 수출 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향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 사업 추진으로 시설원예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산물이 수출로 이어지도록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시설원에 재배 면적은 5278ha로 전국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토마토, 딸기, 멜론, 오이, 파프리카, 장미 등을 재배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카타르 단교로 고립... 식품 사재기 대혼돈

결핍의 소국 카타르가 주변국의 전격적인 단교 조치에 지리적으로도 고립된 지경에 빠졌다.

사우디 등 아랍권 7개국(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예멘, 이집트)이 5일(현지시간) 카타르의 테러 지원을 이유로 단교 조치를 발표하면서 항공, 해상 왕래와 함께 육로 통행을 막으면서 카타르는 문자 그대로 고립의 위기에 처했다.

현지 트위터엔 사우디의 단교 조치로 불안한 느낌 시민들이 슈퍼마켓에 물러가 사재기를 한다는 글과 사진이 게시됐다. 카타르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30~40%가 사우디와 국경을 통해 육로로 사우디와 UAE를 통해 수입되는 탓이다. /연합뉴스

광주지사 직영점 오픈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